

쉬운 결정이었습니다. 재지정 평가지표는 2018년에 교육부와 모든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어도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미 합의한 지표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교육부가 몰랐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 상산고의 경우 평가지표 항목을 문제삼으며 전북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부동의’ 했던 것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이해당사자들에 굴복한 교육부의 특정 자사고 봐주기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교육부가 과연 상산고를 구제하고 얻은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공교육 회복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교육청의 결정을 뒤엎으며 굳이 지정 취소된 자사고를 다시 살려내는 교육부 부동의 결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스스로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제대로 이행할 의지가 없음은 물론, 고교체제 개편을 통한 공교육 회복이라는 현 정부의 교육철학과 교육개혁의 방향이 여전히 불명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처음부터 ‘재지정평가’를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교육부의 소극적 방안에 대한 한계를 지적해 왔습니다. 재지정평가는 평가일 뿐입니다. 기준 미달의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결과이지만, 평가를 무리하게 적용해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수 없음도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지정평가를 통한 고교체제 개편은 불가합니다. 처음부터 **재지정평가와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일반고 전환은 분리했어야 합니다. 평가를 통과한 학교라고 해서 실패한 자사고 정책의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교체제 개편 목적이 평가를 통과한 자사고와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자사고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지정평가에만 의존할 경우 자사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오히려 평가를 통과한 자사고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만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이번 국면을 통해 우리는 **교육청의 ‘평가권’과 교육부의 ‘동의권’은 이런 식으로 언제든 어긋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 재지정평가를 둘러싼 혼란은 재지정평가에만 의존한 채 적극적인 고교체제 개편안을 보이지 못한 교육부가 자초한 참사였습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고교체제 개편은 처음부터 정부의 몫이었습니다. 자사고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잘못된 자사고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밝힌 재지정평가를 통한 단계적 일반고 전환 방안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가능한 개편안도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권학교 지위를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고교 서열화로 인해 파생되는 심각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재지정평가 이외의 다른 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 합니다. 처음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한 근본적 해결을 피해 온 교육부가, 이제 와서는 정권 초기가 아니니 시행령을 개정 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왜 정권 초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까? 고교서열화, 극심한 고입경쟁, 고입사교육 과열, 왜곡된 수월성 교육, 계층 간 분리교육 등 자사고로 인한 차별 교육의 문제는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고, 제도 변화를 통한 근본적 해결을 기대하는 국민의 바람도 여전한데, 왜 정권 초기에 못했으니 지금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정부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국민에게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자사고 문제를 그대로 두고 일반고 역량 강화만을 이야기 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일반고의 역량 강화는 언제나 중요한 선결 과제이지만, 고교서열화로 인한 이 차별의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 일반고 역량 강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고와 다르지 않은 교육을 하는 자사고가, 학생을 따로 선발해서 일반고 3배 이상의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부모를 둔 학생만 따로 모아 좋은 면학 분위기에서 분리 교육 할 수 있게 하는 이 특권 구조를 그대로 허락하는 한 일반고의 역량 강화만으로 고교 격차를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기본적인 고교교육 생태계 복원을 위한 최소 조건입니다. 그래야만 일반고 역량 강화도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불공정한 출발선의 차이를 교정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적극적 고교체제의 개선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어떤 학교는 선호하는 학교, 어떤 학교는 기피하는 학교로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가 특별해지는’ 교육 희망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교육공약과 국정과제로 국민 앞에 이러한 희망찬 교육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공약 실현을 통해 반드시 이 약속을 실현시켜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 8. 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9)